

#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전 펼쳐

### 전북도, 대선공약 연계사업·부처 쟁점사업 등 도 핵심 16개사업 부처 반영 주력 대응

도 행정부지사와 전 실국과장 등 도청 간부진이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새정부의 부처예산 편성 막바지 단계에서 대선 공약사업 반영 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농식품부, 문체부 3개부처의 차관, 기조실장 등을 상대로 대선공약 연계사업, 부처 쟁점사업 등 도 국가예산 핵심 16개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 및 건의하는 등 대대적 활동을 전개했다.

같은날 도청 주요 실국과장 등은 소관부처별 주요부처 예산 관계관을 만나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으며, 이어서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실국과장 참석해 부처 현장 활동 결과 및 쟁점사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연구개발예산과장, 문체부 재정담당관 등을 만나 대선공약 사업의 전북도 연계사업 및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방문해 전북지역 대선공약인 5대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기업공동활용 종자기공 처리센터 구축'과 '인체유용 미생물산업 육성' 사업을 건의했고, 기재부를 방문해 예타 진행중인 '새만금수목원 조성',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용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등 3개사업 모두 공약과 관련된 사업임을 피력했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위촉식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도민안전실장, 제7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등 25명이 참석해 제7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위촉식 및 상반기 운영회의를 가졌다.

또한 대선 지역공약인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예산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를 방문해 2018년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과 예타가 진행중인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사업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사업'을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선정해 줄 것과 전북과 충남내륙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9일에 대선공약사업 및 새정부 정책과제를 2018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 정부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내려 주고 부처예산 제출 기한을 당초 2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2018년 정부예산안에 새정부 기조를 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전북도는 대선공약과 연관된 국가예산사업이 부처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하고, 부처와 이견이 있는 쟁점사업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부처 예산편성 마감 D-10일 기점인 22일부터 모든 도청의 역량을 모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31일까지 지휘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대선공약사업과 연계성, 새정부 정책과제와의 부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부처단계 마무리 예산반영과 기재부 단계 예산 대응 준비를 위해 29일 '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전북 삼락농정 장터' 26~27일 운영

###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10~30% 할인 판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전북 삼락농정 장터'를 운영한다.

3회째 운영되고 있는 장터는 20개 부스에 도내 4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마을상품, 6차산업 인증품 및 신선 농산물 등을 유통단계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시중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전북 삼락농정 장터'는

4~6월, 9~10월 격주(둘째, 넷째) 금~토에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한해 많은 소비자들이 전북 삼락농정 장터를 방문해 안전하고 우수한 도내 마을상품과 6차산업 인증품 및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입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30일까지... 창업교육 수료한 도내 창업자 대상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창업자들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서 창업교육을 수료한 도내 창업자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이나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홍보 및 마케팅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온라인마케팅, 방송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 방송홍보 지원은 업

체당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SNS와 방송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원해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기업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창업준비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창업기업들의 초기 사업 안정과 매출상승을 도울 것"이라며, "전북도와 경진원은 전 주기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창업기업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공고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도, 산업단지 재난안전 워크숍

전북도는 25일, 도 및 산업단지 경찰 소방서, 시·군 재난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그리고 산업단지 경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대명콘도에서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산업단지 재난안전 산업단지 재난안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산업단지관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산업단지 재난안전 관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위험물, 화학물질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로 선제적 재난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특강으로는 SMA(주) 대표의 화학사고 감외형향평가서 작성,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 검사' 강의도 진행한다.

/인재용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전북 6대 정책 키워드 제시

### 전북연구원, 신정부 정책 선제적 대응... 전북공약 23개 사업 후속대응 제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대선 공약에 제시된 정책에 대해 후속과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후속대응전략으로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슈브리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을 분석한 후 전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기조로 6대 정책 키워드를 제시했다.

6대 키워드에는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자

리마련, 신성장동력으로서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재난재해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안전,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 저출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공공부문 일자리의 국가적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사회서비스공단(가칭)의 전북설립과 4차산업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확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 4차산업 전진기지육성 등 국정기조에 맞는 전북사업이 추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공약으로 채택된 7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후속대응을 제시했다.

전북공약으로 채택된 7개 분야에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과 혁신도시에 특화금융중심지 육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설치,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 위한 예산 반영, 무주-대구 고속도로, 군산조선소 준치 등이다.

/인재용 기자

## 도, 피서철 내수면 수상레저 특별점검

전북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과 수상레저 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무주군 등 3개 시·군 4개소에 대해 도 및 해당 시·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선반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등 록기준 적정성 여부,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수상레저 사업자 안전조치에 대한 여부 등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사업장 및 장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해 시정지시 이행여부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조치, 안전 위해 요소 등은 해당 시·군 책임 하에 보수·보강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위해 요소 등을 사전에 조치하고 관리함으로써,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사고발생 우려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도민의 안전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